

#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

- 지방자치법, 시행령
- 지방재정법, 시행령

▣ 지방자치법

지방자치법	지방자치법 시행령
<p><b>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</p>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<b>제133조(예산의 이송·고시등)</b>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·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

지방자치법	지방자치법 시행령
<p><b>제134조(결산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<b>제134조의2(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)</b></p> <p>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,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<b>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</b>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·6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</li> <li>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</li> </ol> <p>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

▣ 지방재정법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<b>제32조의3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</b>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</p> <p><b>제36조의2(성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[이하 "성인지 예산서"(性認知 豫算書)라 한다]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</p> <p>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<b>제38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)</b></p> <p>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,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.</p> <p><b>제44조의2(예산안의 첨부서류)</b>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 다만,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정운용상황개요서</li> <li>2. 세입·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</li> <li>3.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,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</li> <li>4.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,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</li> <li>5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(추정액 기준)</li> <li>6.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(예산액 기준)</li> <li>7. 성인지 예산서</li> <li>8. 성과계획서</li> <li>9.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</li> <li>10. 명사이월 명세서</li> <li>11. 중기지방재정계획서</li> <li>12. 공유재산 관련 서류</li> <li>13.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</li> </ol>	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1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</p> <p>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</li> <li>2. 통합부채[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"지방공기업"이라 한다)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기관·출연기관(이하 "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"이라 한다)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. 이하 같다]</li> <li>3. 우발부채(보증 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li> <li>4.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</li> <li>5.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</li> <li>6. 지방교부세 감액사항</li> <li>7.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</li> <li>8. 지방세지출현황</li> <li>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<b>제53조의2(성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성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</li> <li>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li> </ol>	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<b>제55조(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)</b>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.</p> <p>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,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·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<b>제59조(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(이하 "지역통합재정통계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</p>	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반회계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) 및 기금</li> <li>2.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</li> <li>3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재정상황</li> </ol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, 기준,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</p> <p><b>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세입·세출예산의 운용상황(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)</li> <li>2. 재무제표</li> <li>3. 채권관리 현황</li> <li>4. 기금운용 현황</li> <li>5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</li> <li>6. 지역통합재정통계</li> <li>7.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정보</li> <li>8. 중기지방재정계획</li> <li>9.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</li> </ol>	<p><b>제68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"공통공시"라 한다)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"특수공시"라 한다)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</li> <li>2. 지방재정분석·진단의 결과</li> <li>3.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</li> <li>4.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.</p> <p>④ 삭제</p> <p>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</p>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10.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</p> <p>11.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</p> <p>12.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</p> <p>13.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</p> <p>14. 투자심사사업, 지방채 발행사업, 민간자본 유치사업, 보증채무사업의 현황</p> <p>15.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</p> <p>가. 교부현황</p> <p>나. 성과평가 결과</p> <p>다.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</p> <p>라.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</p> <p>1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</p> <p>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,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"는 "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"로 본다.</p>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는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</p>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<b>제60조의2(통합공시)</b>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 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·평가 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,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.</p> <p>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 할 수 있다.</p> <p><b>제87조의3(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)</b>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 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</li> <li>2.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</li> <li>3.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</li> </ol>	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 시행령
<p>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</p> <p>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 <p>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,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